

“윤 정부, 노동자 ‘시간주권’ 침해 말아야”

이낙연 새미래 공동대표, 책임위원회에서 현재 52시간제 합헌 결정 언급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주52시간제 합헌 결정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에 “노동자의 ‘시간주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게 말한다.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노동시간 연장 시도를 당

장 멈추기 바란다”며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시간주권’을 더이상 침해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며 “현재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

제가 계약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친다는 헌법 소원에 대해서 현재가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현재는 계약의 자유보다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며 “또 주 52시간 제한이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명시했다. 장시간 노동은 노사 자율에 맡겨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의 판단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의 노동시간은 아직도 길다. 2022년 기준 연간 1901시간”이라며 “OECD 회원국 중 중남미 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벨 수준은 한국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꼴찌”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안 그래도 긴 노동시간을 더 늘리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다”며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밝혔던 ‘주 120시간 노동’, ‘주 69시간제’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장시간 노동은 세계 최악의 저출산과 불평등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되어왔다”며 “지금은 회사에 오래 붙잡혀 있다고 해서 성과가 높아지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긴 노동시간은 경제 발전에 꼭 필요한 창의성과 기술 역신을 저해한다”며 “긴 노동시간은 일자리를 줄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새로운미래는 노동자의 ‘시간 주권’을 지켜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도, 비만예방 홍보·캠페인 추진

4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 등 기관별로 자율적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가 3월 4일 비만 예방의 날을 맞아 도민의 비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일상생활 속 건강한 생활을 장려하고자 6일부터 4월 30일까지 비만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

‘비만예방 캠페인’은 ‘가볍게 걷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표어 아래 추진하며, 이는 일상속에서 걷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나트륨·설탕·지방(‘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을 줄이자는 의미로 10개 보건소와 함께 온·오프라인 합동 캠페인을 추진한다.

캠페인은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축제와 연계한 걷기

대회, 건강체험버스 운영, 걷기 챌린지(워크온), 전광판 영상 송출, 언론매체 및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홍보 등을 진행한다.

현재 국내 만 19세 이상 성인 비만 유병률은 2005년 30%를 초과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 전국 유병률은 37.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전북의 성인 비만 유병률은 33.4%이다.

김경 건강증진과장은 “비만예방 캠페인을 통해 전북의 비만율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도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도선거관리위원회 3층 상환실에서 5개 전북특별자치도당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당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전북자치도, “2024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하세요”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서 접수

전북특별자치도가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친환경 농업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을 신청받겠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신청받는 친환경 직불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불제와 전북도와 시·군이 자체 지원하는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 두 가지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국비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보전해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와 연계해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 지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 종료 농가가 관행농법으로 회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을 지원한다.

국비사업은 무농약인증 3년(회), 유기인증 5년(회), 유기지속의 경우 무기한 지원하고, 도 자체사업은 국비지원에 이어 사업지속을 위해 추가적으로 무농약 5년(회), 유기지속의 경우 무기한 지원한다.

유기농법으로 경작할 경우 1ha당 70만원~140만원, 무농약은 1ha당 50만원~12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고, 4월까

지 신청·접수 마무리 후, 10월까지 지급요건을 확인하고, 친환경농업 이행(전년 11월~올해 10월까지 인증여부 등 확인) 및 이행점검 후 11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은 친환경농업 확산으로 농업의 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면서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인 만큼 친환경 농업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수질오염 예방 가축분뇨 관련시설 특별 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발생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새만금유역 외 7개 시·군(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재활용업체 등에 대해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실시하며, 축산농가, 퇴·액비

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 관련시설 중 대규모 시설, 상습 민원 유발시설 및 하천 인접시설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 주변 등에 불법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

준 준수 여부 △무허가·미신고 등 적법화 미이행 농가 등이다.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행실태 확인 및 교육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선관위, 정당 업무협의회 개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사항 안내 및 협조 당부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6일 도선거관리위원회 3층 상환실에서 5개 전북특별자치도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국가혁명당)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당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북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관리사항과 △우편투표 포함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 △개표 시 수검표 추가 등 이번 선거에서 새로 도입하는 절차를 설명했다.

또한, 사전투표운용장비와 투표지분류기 등 선거장비의 개선사항을 안내하고 당내경선 결과 통보, 선거인

교통편의 제공 및 지원, 투·개표 참관인 신고 등 정당의 참여 사항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의견과 협조를 구했다.

전북선관위 김영현 사무처장은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하고 화합하는 아름다운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정당은 정책과 공약으로 정당당당한 선거운동을 펼쳐주길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